

정기간행물사업자 발행 편집자: 이상훈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반로 242 번길 35-9. 401호 신고번호: 바00002. 신고일 2011.05.11. 기간 7호

## 독도소식지7호를 내면서

독도소식지 6호를 내고 3개월 되었습니다. 이번은 좀 더 좋은 내용을 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더 좋은 독도소식지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당신은 독도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지켜야 합니다. 독도 수호 운동에 참여하세요. 도와주시면 좀 더 좋은 소식지가 됩니다. 편집자

## [사설] “독도, 일본 영토 아니다” 말한 日 교원노조

2011.10.29 오전 10:51

일본 도쿄의 교원노조가 최근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28일자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 교직원노동조합이 올해 6월 나온 일본 중학교 지리 교과서 4종을 비교 분석한 검토 자료에서 “(다케시마가) 일본령이라고 말할 역사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와 우익 세력의 독도 날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교사들의 이런 사실 인식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도쿄도 교사노조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 교과서의 기술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고, 독도(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 견해가 일본 내에서 보편적인 인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지만 독도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교사노조의 이 같은 바른 인식에도 일본 정치권과 우익 세력들이 자신들의 억지 주장을 굽힐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교사노조의 견해가 일본 내에서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고 상식이 되기에 아직 그 파급력이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일부의 작은 목소리가 무시당하고 정치적 선전과 도그마에 묻히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보태야 한다. 외교통상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각국 세계지도에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는 사례는 전체 3천380건 중 49건(1.5%)에 불과했다.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한 92건(2.8%)까지 합해도 전체 5%에도 미치지 못한다. 나머지 95%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일본 영토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게 독도의 현실이다. 몇 달 전 일본청년회의소가 일본 고교생 400명을 대상으로 국경선 조사를 해보니 다케시마와 쓰시마를 모두 일본 영토라고 표시한 학생이 9.3%에 불과했다. 그러나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한 교과서가 버젓이 사용되고 계속 늘어나는 한 일본 청소년들의 인식이 언제 달라질지 모를 일이다. 도쿄 교원노조가 우려하듯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등과 같은 주장을 사실인 양 교육할 경우 학생들에게 ‘감정적 내셔널리즘’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와 민간사회단체들은 더 늦기 전에 치밀한 논리와 전략으로 일본의 억지 주장을 반박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바른 인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일본의 공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비상식이 상식을 이기는 일대 사건이 벌어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매일신문 공식 트위터 @dgtwt / 온라인 기사 문의 [maeil01@msnet.co.kr](mailto:maeil01@msnet.co.kr)

독도수역이 공동 된 것과 세계 각국지도 표기는 독도가 넘어가는 중이다. 독도를 사수하자.

## 독도사수연합회의 독도정책을 제안

아래 서명인은 아래 사항을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청원 합니다

1. 독도 박물관을 국립 박물관으로 승격하여 독도연구비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2. 우리 땅 독도 자유로운 입도 보장과 독도의 주거자유 보장 하십시오
  3. 독도 관광지 개발하여 관광수입 올리고 국 내.외에 관광지로 홍보 하십시오
  4. 독도 지킨 독도 의용수비대를 국가 최고 유공자로 모시고 독도 수비 공을 높이 기리십시오
  5. 잘못 맺어진 신 한.일 어업 협정과기, 재협상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권을 차차 주십시오
- ※. 이 요구가 이행 되면 독도는 지켜진다. 독도사수연합회가 서명운동 중에 있습니다. 서명 받아 보내주십시오

## 누가 독도 지킬 방법 제안 하드나?

독도 지키자고 말만 한다고 지켜집니까?

“나는 나라를 위하여 독도지킴이가 되겠습니다.”

붉은 글 한줄 쓰고 서명 받으면 독도 지켜지나?

“독도수호참여 100만인 서명운동”

푸른 글 한 줄 쓰고 서명 받으면 독도 지켜지나?

독도사수연합회는 좌측의 독도 정책 제안을 한다. 우리가 서명운동을 안 해도 정부가 정책을 고치면 독도는 지켜진다고 본다. 독도정책을 고치게 하는 수단으로 서명운동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애국적인 시민단체들이 많다. 이주 회원이 많은 단체도 있고 재력이 튼튼한 단체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국단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독도를 지키자는 주장이나 독도문제로 일본을 규탄하는 행동은 하면서도 정부의 정책 변경은 요구 하지 않는다.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을 막으려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유명한 단체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안 하는 것으로 생각 한다.

(독도 이상훈 010-6504-6510)

## 독도 개발 (안)

동도와 서도는 170m 정도 거리가 된다.

붉은 곳은 방파제며

회색은 선착장이다.

푸른 부분은 매립을

해서 상업지나 주택

지를 만들자는 개발

(안)이다. 독도에 관

광객이 체류 시간을

늘려서 독도 주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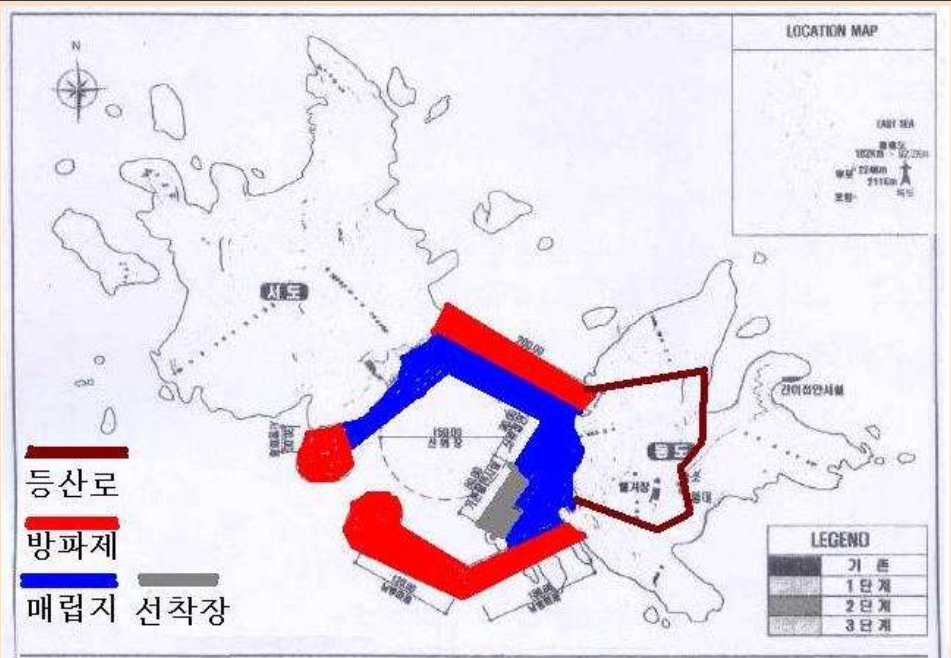
장사가 되게 하자는

것이다. 개발안은

강향희 회장의 것인데

독도 이상훈 수

정한 것입니다.



1. 독도방파제를 만들어 파도로 인해 접안을 못 하는 것을 접안 하도록 한다.
2. 동도 정상에 관광객이 올라 갈수 있게 하고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을 북쪽 방파제로 하여 관광객이 동도를 전부를 받고 지나온 기분이 들게 한다.
3. 북쪽 방파제에 도착 하여 서도에 바다가로 주민 숙소까지만 갈수 있게 한다. 독도에 머무는 시간 현재 30분인 것을 5시간 정도로 한다. (독도주민이 장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살 수 있게 한다. 어업전진 기지도 좋다)
4. 서도와 동도 사이에 최소한 주민들이 20가구 살 수 있도록 방 한칸 부엌 한칸으로 20가구 짓고 어민 7가구 횃집 4가구 기념품가게 3개 수퍼 3개 그 외 필요한 가게 3개정도를 만든다. 서도에는 동도 쪽 바닷가만 관광객이 머물고 그 외는 생태계를 보호한다.

## 일본의 변한 독도정책

약 50년 전만해도 일본의 각료나 지방 관리들이 독도 일본 땅으로 주장하면 그 관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못 있고 자리를 내 놓게 되었다. 즉 한.일간의 문제를 일으킨 벌 이었다. 이제는 세상이 변해서 독도 한국 땅 하는 日 의원은 자리를 내놓고 독도 일본 땅 하는 각료들만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다. 이것은 일본이 독도를 도발하는 강도가 높아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은

점점 독도를 침탈 하려는 강도가 높아진 것이다. 일본은 독도침략을 그만두고 일본정부는 역사를 바로 가르치고 한국의 침략과 위안부 문제 등을 해결하고 한.일 양국이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독도영토문제는 축구와 야구와는 비교를 할 수 없이 독도문제가 중요하다. 축구 야구는 응원 많이 하고 독도응원은 더 많이 하자. 관심을 갖자. 편집자.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수신처: 在釜山日本国総領事館

창조: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 칙령 41호 제정은 대한민국 영

1. 일본과 한국의 친선을 위하여 노력 하시는 일본국 총영사에 감사드립니다.
2. 저희 단체는 부산시 금정구에 사무실을 두고 일본과 한국의 독도문제를 확실하게 알고 영토분쟁을 없애 하려고 노력하며 선명한 일본인들과 친하게 하려는 단체인입니다.
3.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한 대한제국령 제41호 제정 111주년 기념하여 대한제국령 제41호의 역사성을 기리는 것은 물론 기념식을 통해 국내외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역사적 근거를 통해 알리고, 또한 독도의 주권국으로 유엔의 국가적 위상을 강화하고, 대내외적으로 독도수호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부산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기념식을 했습니다.
4. 대한제국령 제41호의 근거를 첨부하오니 보시고 일본국에 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독도사수연합회장

시흥 2010-10-19 최상훈 부회장 김영희 사무처장 이대준

우편번호: 609-809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서동 105-22

전화: 070-7859-7118, 팩스: 051-522-7118, 폰: 010-6504-6510, 대표메일: dokdo@paran.com

한민국의구성원 아랍대독도보조자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독도를 한국 영토로 세계에 공표

대한( Korean ) Emperor's imperial ordinance order No. 41 in 1900 positions Dokdo as a Korean territory to the world.

한민국의구성원 아랍대독도보조자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 칙령 41호 제정 111주년 기념식 및 독도 사수 결의대회

독도사수연합회

官報

宮廷雜事

諭旨

1900年10月25日

朝鮮皇帝 高宗皇帝 御旨

朝鮮皇帝 高宗皇帝 御旨

朝鮮皇帝 高宗皇帝 御旨

官報

宮廷雜事

諭旨

1900年10月25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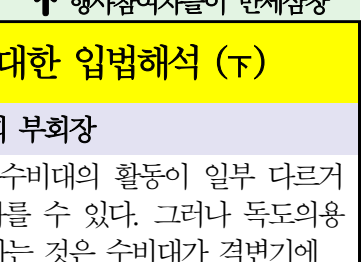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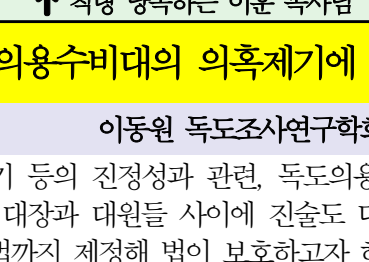
朝鮮皇帝 高宗皇帝 御旨

朝鮮皇帝 高宗皇帝 御旨

朝鮮皇帝 高宗皇帝 御旨



**설 명 : 위 3장은 일본영사관  
에 전달 한 것이며  
내빈 소개 김영삼 회장님 →  
격려사 신유근 회장님 ↓**



↑ 행사 설명하는 독도 이상훈    ↑ 칙령 낭독하는 이훈 목사님    ↑ 행사참여자들이 만세삼창

**독도의용수비대의 의혹제기에 대한 입법해석 (ㄱ)**

이동원 독도조사연구학회 부회장

다음으로 수기 등의 진정성과 관련,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이 일부 다르거나 수비대의 대장과 대원들 사이에 진술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까지 제정해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수비대가 격변기에

일시적이거나 독도를 지켜준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해 국민과 정부가 감사의 표시로 특별법으로 입법을 제정하여 보호코자 한 것이다. 법 제1조는 "...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특별한 희생'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이'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활동을' '특별히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행한 것이다. '특별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나 전체적인 견해가 아닌 개개인의 시각에서는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의미에는 일부 다른 진술이나 증거의 존재를 포함해 입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되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수기 등의 진정성을 다투는 것은 탄핵증거로써 한계가 있고 기존 증언자들의 상치되는 증언이나 서증이 반대당사자의 다툼 없이 증거력을 형성한 듯이 소개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미 입법으로 해결된 사안에 대해 너무 가벼이 이의를 제기하여 입법목적 훼손해서도 안 되며, 이는 증거법상 제한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국방부, 외무부, 경찰청 등의 문서가 공문서로서 사문서에 비해 진정성이 추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에 관한 실제 진실은 일부 대원은 일부사실에 제한

적으로 알고 있을 뿐 그 전말은 수비대장만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은 이를 제 2조 제 1호에서 명문을 두어 인정하고 있다. 또한 수비대장의 수기 또한 당사자가 사망하고 없어서 이를 다툴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전체의 내용을 모르는 일부 생존자의 증언만으로 수기의 실질적 진정성을 다투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활동의 병존상연속성(또는 연장선)과 관련해서도 입법으로 해결되었다고 본다. 즉, 해당 법은 이미 기간과 인원수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속에는 경찰관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법으로 양자를 포함해 보호하고 있으므로 논의의 실익이 없다. 즉 법은 제1조 목적에서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이라고 규정해, 독도수호를 위해 특별히 희생한 사람이면 민간인이든 경찰관이든 그 누구의 구분 없이 법으로 보호코자 한 것이다. 즉, 법은 수비대의 활동사실이 있는 사람이면 신분의 구분 없이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신분을 기준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자는 병존해 양립가능하고, 법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활동기간이나 인원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코자 한다면, 그 이의가 타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법률 개정안을 정부나 국회의원 20명 이상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통해 발의해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을 개정하거나 ①법률이 헌법정신에 위반됨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신청하거나 또는 국가의 입법권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위법하게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 밖에 당해 행정기관이 구체적 권리보호를 이유로 해 헌법재판소에 기관 간 쟁의를 제기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적법절차에 의한 이의방법이 있음에도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이나 기관이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이의제기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입법한 법률에 대한 입법목적 훼손하는 행위가 되고 전체로서 국민의 주권의 현시에 대한 도전이 된다.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기관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제정한 법률에 대한 입법목적 훼손하는 행위를 거치지 않고 훼손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법상 독도의용수비대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그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애국심 함양에 반대되는 행위'로써 법에 도전하는 행위가 된다. (끝)

독도조사연구학회 이동원 부회장님  
원고 감사합니다.

### 『1910년 韓日병합조약』 유효론과 獨島 領有權 문제4편



**려해연구소**  
RYEO HAE INSTITUTE  
慶海研究所 김영구 교수의 해양법 포럼

제국주의적 확장 정책에 따라서 일본이 한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대륙을 침략함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가장 먼저 만나는 타국의 영토(領土)가 바로 울릉도와 독도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한국 침략의 첫 번째 단계는 울릉도와 독도를 점령하는 것이다. 1905년 독도를 영토 편입함에 있어서 일본의 진실 된 의도는 '울릉도와 독도'를 점거하는 것이었다. 물론 1900년도부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실질적인 침략행위는 이미 자행(恣行)되고 있었다. 당시 울릉도는 이미 명확하게 한국의 영토인 것이 너무 잘 알려져 있었으며 그들의 불법적인 영토 편입 조치가 주변 국가들 즉 국제사회의 주의(注意)를 환기시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선 편의적으로 독도만을 영토로 편입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사실상 독도를 영토로 편입하는 조치 자체도 불법적인 것이며 국제법상 용인되기 어려운 것임을 일본제국 정부의 요원들 대부분이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들은 그래서 독도 영토 편입행위 자체도 극히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진행한 것이다. 그들의 독도 영토 편입 행위가 한반도를 침략하는 첫 번째의 시도이며, 침략적 점거의 실질적인

목표는 독도라 기 보다는 울릉도 이었으나, 그들은 이 영토 편입조치 자체를 정한론(征韓論)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점거한다는 그들의 침략적 시도에 있어서 하나의 상징적인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일본은 도꾸가와 막부 시대와 명치 정부 시대를 통하여 일관되게 울릉도와 독도를 하나의 일체(一體)의 도서군(島嶼群)으로 파악해 왔기 때문이다. 1905년 1월 22일 일본제국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은밀하게 영토로 편입하기로 결정함에 있어서 독도의 명칭을 종래 자기들이 울릉도의 명칭으로 사용하던 다케시마 라는 이름을 갑자기 인위적으로 차용(借用)한 것도 말하자면 이러한 이들의 본심을 들어낸 하나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이 과거에 독도를 불법적으로 영토로 편입한 사실이 적법한 것이었으며 지금도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과거에 제국주의적 의도로 한국을 병합하여 수탈(收奪)한 역사적 사실 전체를 하나의 합법적인 기정사실(既定事實; fait accompli)로 받아들이라고 때를 쓰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일본은 그들이 독도에 대한 영토권 주장을 하는 것은 한일 간의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인식을 극명하게 들어내고 입증하는 가장 명백하고 전형적인 증거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독도사수연합회 홈페이지 교수논문에서 본 논문 전부 볼 수 있습니다. 독도 이상훈

### 日, 해양경찰 권한 강화 추진

기사입력 2011-01-04 10:27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이 '해상(해양)경찰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센카쿠(尖閣)열도(중국 다포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싼 중국과 영유권 갈등과 관련된 조치로 풀이되지만, 독도 문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신문에 따르면 마부치 스미오(馬淵澄夫) 국토교통상이 빠르면 이달 안에 시작되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해상보안청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주된 내용은 일본 순시선이 '영해'에 불법 침입한 어선을 강제로 정지시키는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금방이라도 범죄를 저지르려고 할 때나' '생명·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고 시급한 경우'에만 어선을 정지시킬 수 있었지만, 개정법에서는 '국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력 뿐만 아니라 해상자위대를 출동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경찰력으로 역부족이더라도 해상자위대를 출동시키려면 방위상이 '해상경비행동' 명령을 내려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자위대가 쉽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해상자위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chungwon@yna.co.kr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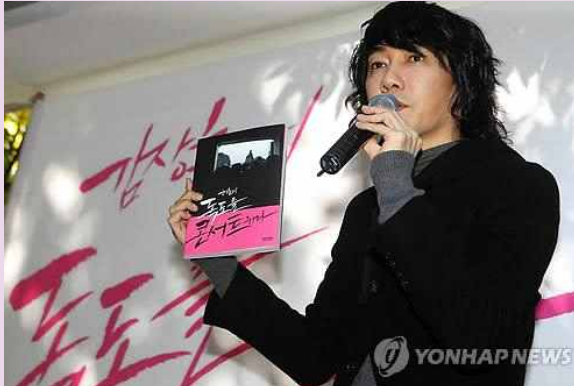
### <김장훈 "독도의 적은 우리의 그릇된 관심">

독도의 날 맞아 '독도 페스티벌' 열어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독도의 적은 우리의 무관심이 아니라 무작정 (일본을) 욕하는 우리의 그릇된 관심입니다."

가수 김장훈이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강남구 역삼동 비주얼아트센터 '보다'에서 '독도 페스티벌'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장훈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을 욕하며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무작정 주장해선 안 되므로 일본 등 해외에 논리적인 반박을 할 수 있도록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독도전문사이트 '트루스 오브 독도 닷컴(www.truthofdokdo.com)'을 한국어, 일본어, 영어판으로 개설하고 이번 '독도 페스티벌'에서 독도 사진 전시회, 독도 관련 도서전, 독도 관련 3D 영상물 상영을 하는 것도 이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장훈은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킹 서비스) 시대인 만큼 다음 달 각국의 언어로 된 독도관련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독도사진집 소개하는 가수 김장훈

내년 3월 안에 독도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5개 추가로 만들 것"이라며 "현재 전 세계 독도 관련 사이트 상위 10개가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일본 측 주장이 담긴 사이트인데 ....."

지면상 생략 합니다.

네이버 독도사수대. 독도사수대. 뉴스게시판에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본 도쿄도 교원노조 선생님

일본 도쿄도 교원노조는 진실만을 가르치며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선생님들이다.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사는 세상에 올바른 교육자들 존경한다. 진실한 스승들이다. 교원노조 자체 **검토** 자료에서 "독도가 일본 령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는 없다"고 한국과 일본의 장래를 염려 해주는 것으로 진정한 우리와 공동번영의 동반자가 될 충분한 자질의 소유자들이다.  
독도 이상훈

### 충청북도 지회장 조남용님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349-6 번지  
전화 010-6225-524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모두 독도의 주인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영토화하려는 행동은 일본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날까지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일본의 잘못된 야심과 망동을 막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충청지역에 함께 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독도는 우리 땅 외치기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독도는 목숨 걸고 지켜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땅입니다. 충청북도 지회장 조남용

### 인천광역시 지회장 김상열님



인천시 부평구 삼산1동157번지  
삼산중공 A 102-302호  
전화 011-474-0934

옛 문헌이나 어디를 찾아봐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영토임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일본은 우리의 독도를 빼앗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행 하고 있습니다. 독도의 주인인 우리 독도 사수연합회가 앞장서고 온 국민이 독도 사수연합회의 회원이 되어 국력을 합심하여 일본의 잘못된 야망과 행동을 지구상 모든 나라에게 알리고 일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합심된 모습과 힘을 보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회장 김상열

# '독도=한국 땅' 견해 밝힌 일본교직원노조에 "매국노들, 이시하라 뭐하는가" 日네티즌 격앙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2011.10.29 00:01 /  
수정 2011.10.29 00:01

- 9 : 名無しさん@12周年:2011/10/28(金) 1422:12:35 ID:1P33CyzB0  
クソヤロー死ぬ★
- 10 : 名無しさん@12周年:2011/10/28(金) 1422:42:59 ID:WTNVm+wo0  
自国の公務員相手のコメントがこれって  
もっとキルべきだろ
- 11 : 名無しさん@12周年:2011/10/28(金) 1422:53:14 ID:Aft4uNk0  
奥石に嚴重注意しとけよ
- 12 : 名無しさん@12周年:2011/10/28(金) 1422:59:02 ID:9e1ngt8+0  
しいの?  
餌い主に逆らって? w
- 13 : 名無しさん@12周年:2011/10/28(金) 1423:48:69 ID:30avE1gQ0  
ほんと教師の肩っぷりはいいか減どうにかならぬの?
- 14 : 名無しさん@12周年:2011/10/28(金) 1423:52:39 ID:pKz75+7n0  
奥石を叱りつけろ!
- 15 : 名無しさん@12周年:2011/10/28(金) 1424:08:55 ID:6ZhWqHnx0  
お前が言うなどっておく
- 16 : 名無しさん@12周年:2011/10/28(金) 1424:25:48 ID:yXIMeW2i0  
公立校は要らない。その予算を奨学金に回せ
- 17 : 名無しさん@12周年:2011/10/28(金) 1424:27:52 ID:c2c8VFkq0  
公務員クビにすればいいじゃね?

<도쿄 교직원노조에 대한 악플이 쇄도하고 있다.  
사진=2ch 및 블로그 캡처>

일본 도쿄 교직원노동조합이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자 일본 네티즌들이 들끓고 있다. 일본 내 각종 커뮤니티 등에 "한국에나 가버려라" "매국노"라는 악플이 쇄도하고 있다. 2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최근 도쿄 교직원노조는 내년 중학교 새 교과서 채택과 관련,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지리 교과서 4종을 검토했다. 그러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를 교육하면 '감정적 내셔널리즘'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쿄 교직원노조는 공무원에 속한다. 홈페이지에 "도쿄의 공립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교직원들이 모였다"는 소개 글이 적혀 있다. 나라의 '늑'을 먹는 공무원들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부정한 것이어서 네티즌들의 반발이 더 거세다. 험한 성향의 사이트 2ch은 물론이고 포털사이트 라이브도어, 블로그들에 "공무원들이 저래도 되는가"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 뭐 하는 것이냐"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2ch에 글을 올린 네티즌 'gThCN\*\*\*\*'는 "일본 교원노조는 교육계의 암이다. 일본의 미래를 위협한 세력에 맡기고 있다", 'svHKw\*\*\*\*'는 "반국가 조직이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반역죄를 물어라" "교원노조=공산당"이라는 글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극우성향인) 이시하라 도쿄도지사는 뭐 하는가. 그의 해명을 듣고 싶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라이브도어에 글을 남긴 'x7ab9\*\*\*\*'는 "이것은 정부 견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반일적인 의견"이라고 비난했다. 라이브도어에 올라온 글도 "그렇게 일본이 싫고 한국이 좋으면 한국으로 가라" "공무원들이 정신 나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 네티즌은 "한국이 말하고 있는 근거를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근거가 잘못됐음을 가르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적었다. 도쿄 교직원노조 측은 이번 견해와 관련, "다케시마에 대해 기술한 일본 정부의 견해뿐 아니라 상대국에도 의견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자료를 썼다"고 설명했다. 김진희 기자

# 독도의 실효적 지배

기사입력 | 2011-05-11



배상용 울릉군의회 부회장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는 '울릉·독도해상국립공원지정'보다는 거주장스런 독도 천연기념물 336호의 허물부터 벗어 던져야 한다. 지난 달 27일 국회 독도영토대책특위 소속 여야 10명의 의원이 환경부에 울릉·독도해상국립공원 지정 요청서를 제출했다는 언론보도 이후 연일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독도를 울릉도와 연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만들고 이를 전 세계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소개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울릉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인데 독도는 아직 문제가 있으니

울릉도와 한 세트에 만들어 홍보 하지는 논리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미 독도는 천연기념물 336호 지정 천연보호구역으로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또다시 국립공원으로 지정 한다는 것은 '옥상옥 (屋上屋)'이 아닌가 싶다. 독도를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관리법을 보면 독도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상변경신청' 후 문화재청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있다. 천연기념물 보호법이라는 것이 그리 쉽게 볼수 있는 관련법이 아니다. 지난 해 독도에 국기게양대

3기를 설치하겠다고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신청을 두 번이나 했지만 결국 1기만 허가를 득해 현재 공사 중이다. 독도현장사무소 설치하는 총 100억 규모의 사업으로 독도의 실효적지배를 위해 관련 사무소 직원들이 거주할 공간을 만드는 것조차 3번에 걸친 현상변경신청에도 불구,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해 2년째 표류하고 있다.

© 경북일보 &kyongbuk.co.kr,

지면상 이후 생략. 홈페이지 오셔서 보세요.

# “독도를 동아시아 ‘두바이’로”

[한겨레]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등록 : 20080801 18:08

## 영남대 독도연구소, 교과부에 개발안제출

독도(사진)를 동아시아의 '두바이'로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남대 독도연구소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 독도에 인공섬을 연결하는 등 8대 독도 개발 대안을 담은 독도문제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독도연구소는 이 보고서에서 340만㎡ 규모의 초대형 부유구조물(인공섬)을 독도에 연결해 설치하고, 단순히 지키는 것에서 나아가 생산형 도시로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도를 동아시아의 두바이로 만들어 우리의 영토주권을 공고히 하자는 것이다. 독도연구소가 제안한 부유구조물은 아파트형 콘도미니엄과 리조트, 국제회의장 등 해상 공간과 담수화 설비, 해양목장, 해양 광물·수산자원

획득을 위한 연안구조물이다. 1단계는 항만·관광·호텔·레저시설 등을 갖춘 정주여건 조성, 2단계는 독도 자원개발로 산업화 공간 조성, 3단계는 기상·해상 재난 대비 등 연구와 평화의 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2009년 착공해서 2017년 완공하자고 기간까지 정했다.

독도연구소는 “두바이 팜아일랜드의 경우 인공섬 조성으로 엄청난 경제·기술적 파급효과를 거두었다”며 “독도와 인공섬을 연계한 국제 해양도시 개발사업이 성공하면 영토 보전은 물론, 우리 해양기술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독도사수연합회 후원 해 주신 후원사

**신우정공**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311-4  
 TEL : (051) 528-8839  
 FAX : (051) 528-8861  
 H.P : 011-558-4198  
 E-mail : sw8818@chol.com

대표 신재식(용기)  
HL5 JQN

- 사출금형
- 특수금형
- 다이캐스팅
- 금형설계
- 건축자재
- 할마톤 난간대
- 배란다
- 계단, 핸드레일 관련부품

**OORI PATENT** 대표변리사 조철현

우리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648-23 여삼빌딩 13층  
 Tel.(02)556-3453 Fax.(02)557-3038  
 E-mail : cho@oori.co.kr

**나라사랑**

1. 독도모형  
2. 저금통기능  
3. 향수통기능

"독도사랑저금통" 검색하시면됩니다  
010-9901-2853

**samsungbio**

보온물통과 가방 055-366-2032

보냉가방

독도소식지 7호의 편집을 끝내면서 독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고 나라가 없으면 국민은 없고 민족만 있을 뿐입니다. 편집을 도와주신 윤예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독도 이상훈 연락처 010-6504-6510  
 후원 하실 분 법인통장 우체국 601229-01-002084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